

화웨이 5G장비 도입한 LG U+, 보안 강화에 총력전

美·中 장비싸움에 영국도 가세
“스파이 행위엔 회사 문 닫을 것”
화웨이CEO, 美 공세 정면대응

LG U+, 이달 기지국 1.2만개 구축
보안관련 70개 가이드라인 검증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내 중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고 아래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작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5세대(5G) 이동통신을 둘러싼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5G 선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고민도 깊어졌다. 특히 이달 5G 통신망 상용화를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화웨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방영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직 세계의 일부만 대표할 뿐”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고 미국의 공세에 정면대응했다.

영국 정보기관이 최근 화웨이 5G 장비 안보 위험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낸 직후다. 런정페이 CEO가 해외 언론과 이러한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국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소속이다.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화웨이 보이콧이 사그라들 수 있다.

미국이 문제로 삼은 것은 화웨이의 보안이다. 2012년 화웨이 장비가 정보 유출을 하는 ‘백도어(back door)’를 통해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보안 이슈가 불거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멩완저우를 미국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런정페이 CEO는 “화웨이는 어떤 스파이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행위를 하면 회사 문을 닫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 5G 패권 경쟁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자칫 중간에서 애매하게 입장을 밝혔을 경우 무역 보복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비 보안 이슈로 시작된 미·중 견제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경제 이슈로 넘어갔다. 이것이 업계의 전반적 평가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미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보안 이슈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향후 5G 지도는 외교적·경제적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양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다. 최근 미국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서 벗어난듯한 유럽의 독자노선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5G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5G의 경우 초기에는 LTE망을 함께 쓰는 NSA(4G·5G 복합 운영 체제) 방식으로 구축된다. 이미 LTE 도입 당시 화웨이 장비를 들여온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빠른 망 구축을 위해 같은 회사 제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이동통신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전국에 1만2000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 등으로 불거질 수 있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보안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과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 받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보안 관련, 70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CEO 주관 전사 네트워크 품질·보안 점검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를 식별·관리하는 것은 유선 코어망에서 이뤄지는데 코어망 장비는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또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5G 무선 기지국 장비에서 백도어를 통한 가입자 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향후 중국은 자국의 5G 영향력을 화웨이 등의 회사를 앞세워 전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견제 또한 심해져 새로운 미·중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내에서는 당분간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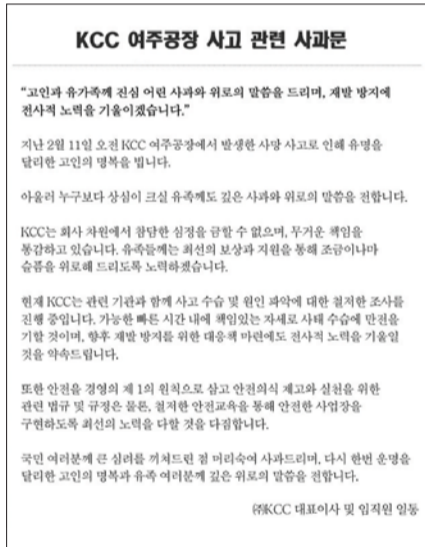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장비 사용이 논란이 되긴 하겠지만 막상 5G 상용화가 되면 큰 이슈는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CC “고인·유가족께 사과… 재발방지 최선”

여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사과

노조 “사측의 부실한 조치가 원인”



KCC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KCC는 19일 여주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과 임직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KCC는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유족들께는 최선의 보상과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슬픔을 위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CC는 또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내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KCC 여주공장에서는 가로 3.6m, 세로 2.7m 크기의 대형 유리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나 홀로 마무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6) 씨가 깔려 숨졌다.

이에 KCC 여주공장 노동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KCC 여주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한 공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연이은 죽음을 맞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또 “연이은 사고는 인력 충원 없는 기형적 교대제로 인한 잦은 보직 변경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사측의 부실한 조치가 원인”이라며 “지난해 사고 이후 후속 조치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형식적 조치에 그친 노동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bada@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5G 시작도 안했는데...

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압박

민생경제연구 등 토론회

“이통사에 과도한 부담 주지 않는 ‘월 2만원’ 1개 요금제 의무화 불과”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통신요금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 관련 인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 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여연대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5G 시대의 희망이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이라는 고통·고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G 도입으로 전송속도·전송량·콘텐츠 등에 있어 소비자의 편리함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감당해야 할 통신요금과 가계 통신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안 소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관련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나서 일부 5G요금제를 낮게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일각에서 보편요금제가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가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5G 통신 투자 확대와 매출 하락에 직면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비는 최대 28조원으로 예상된다. 전폭적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지난해 4분기 무선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은 ▲SK텔레

콤 3만1334원 ▲KT 3만1608원 ▲LG유플러스 3만1119원으로, KT와 SKT는 5분기 연속, LG유플러스는 6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는 선택약정할인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은 “안 소장이 여지가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소회했고,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아직까지는 통신사에서 요금인가,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남 과장은 또 “과기부가 가계통신비와 관련 법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요금제가 어렵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며,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요금이나 단말 가격 인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석대성 기자 bigstar@

文 “포용국가, 국회의 입법·예산 필요”

>> 1면 ‘文 대통령...’서 계속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에서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